

시론

전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세·지방세간 조정 및 지방세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참여정부 국정과제 로드맵 100대 과제에도 지방재정 관련 부분으로는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교부세제도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자주적·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 온 사항이다.

참여정부 2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재정분권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재정분권은 활발한 논의에 비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재정분권을 위해 추진한 개혁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과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이 종전 내국세의 15%에서 19.13%로 상향조정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축소 개편되었다. 둘째, 지방양여금과 증액교부금은 폐지되었다. 셋째, 세분화되었던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면서 일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틀 속에서 운영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 상향 조정은 지방양여금 폐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조치였으며, 의미있는 수준의 일반재원 확충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보조금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일부 전환한 것은 방향 설정은 잘 되었으나, 이를 위한 분권교부세 설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은 참여정부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제도의 취지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사업별 지방채 발행 승인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달을 확대하였다.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재정적 제재수단 확보,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반면에 지방세제 개혁은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편 외에 가시적 성과가 거의 없는 편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지방재정 확충 차원의 개혁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세부담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 개혁이다. 이렇게 지방재정조정제도보다 지방세 개혁이 미진한 이유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덜한 데 반해 지방세 개혁은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